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1990~2010년

반정호*

I. 머리말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스스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라는 특징으로 인해 여러 위험(risk)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이승렬 외, 2009; 박희석, 2011). 최근 들어 금융세계화와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기변동성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민간소비 위축과 자영업의 경쟁심화로 나타났고, 결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시점이었던 1998년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08천 개, 285천 개씩 감소했다. 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2003년 신용대란 시기에 147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후 2004년과 2005년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영업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259천 개, 119천 개의 자영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자영업국세 통계(2010년)』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3년내 폐업률이 10.4%를 기록하고 있어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의 규모는 2010년 기준 5,59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8년 기준 31.3%로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 브라질(31.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OECD 회원국(15.8%), EU 27개국(16.5%)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술한 것처럼, 경기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손쉬운 자영업 창업은 자영업 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문의 경쟁과열과 영업부진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201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80.2%가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로 창업준비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익성이 낮아 전문성을 갖춘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자영업자 개인과 이들 가구의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자의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 상위 20% 가구의 대출목적이 주택자금마련(57.0%)에 이어 사업자금마련(34.0%)과 생활비 충당(7.0%) 순으로 높아 자영업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¹⁾

이 글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²⁾으로 소득실태와 변화추이를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실제로 약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정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인 이상 도시가구로 한정하였다.

II.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추이

<표 1>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도시 2인 이상)의 실질경상소득(균등소득)의 규모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영업자 가구의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사이전소득)은 1990년 246천 원 수준에서 2010년 기준 2,312천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즉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1990년 208천 원에서 2010년 1,635천 원까지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상소득과 가구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3%, 10.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1990년 237천 원

- 1)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증가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부채규모 자체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2006년 129%에서 2010년 146%까지 증가해 가구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가구소득 정체 현상과 함께 물가 및 금리가 모두 인상되고 있어 부채에 대한 가구의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경향신문, 2011년 8월 19일자 보도).
- 2) 이 글에서 자영업자 가구라 함은 가구의 사실상 생계유지에 책임을 지고 비용을 조달하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가구를 의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표 1>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 실태와 추이: 1990-2010

(단위: 천 원, %)

		1990	1993	1996	1998	2001	2003	2005	2008	2010	증가율
자영자 가구	경상소득	246	465	785	816	1,060	1,292	1,504	1,921	2,312	11.3
	본인근로+사업	208	391	642	655	812	980	1,102	1,353	1,635	10.3
	가구원근로+사업	30	65	120	132	208	272	330	475	574	15.1
	재산소득	2	3	7	7	7	5	5	8	5	5.1
	공적이전소득	1	1	4	3	9	12	22	36	46	20.1
	사적이전소득	5	6	12	17	23	23	45	49	53	12.2
임금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237	457	790	878	1,188	1,428	1,705	2,242	2,470	11.8
	본인근로+사업	186	354	588	664	882	1,065	1,237	1,634	1,783	11.4
	가구원근로+사업	39	84	168	176	252	311	380	491	547	13.4
	재산소득	2	5	7	11	11	5	7	7	8	5.7
	공적이전소득	1	3	6	5	12	14	25	43	60	19.3
	사적이전소득	7	11	20	23	30	34	56	66	71	11.7

- 주: 1) 경상소득은 실질·균등소득임.
 2) 실질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05=100.0)로 조정한 금액임.
 3) 균등소득은 해당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금액임.
 4) 증가율은 1990~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에서 2010년 2,470천 원으로 연평균 1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186천 원에서 11.4% 증가한 1,783천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1996년 이전까지는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앞서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시점부터는 자영자 가구의 소득이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낮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자영자 가구에서는 가구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1990년 84.8%에서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 80.4%까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 현재는 70.7%로, 1990년에 비해 14.1%p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1990년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78.8%에서 2010년 72.2%로 같은 기간 6.6%p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자영자 가구의 사업체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소득하락으로 인해 가구주를 제외한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이 1990년 12.3%에서 2010년 24.8%로 12.5%p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가구의 기타가구원 소득구성 변화(16.6%→22.2%, 5.6%p)와 대조를 이룬다(표 2 참조). 즉 최근으로 오면서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소득창출력 약화로 인해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자영자 가구의 소득구성(경상소득 기준) 변화추이: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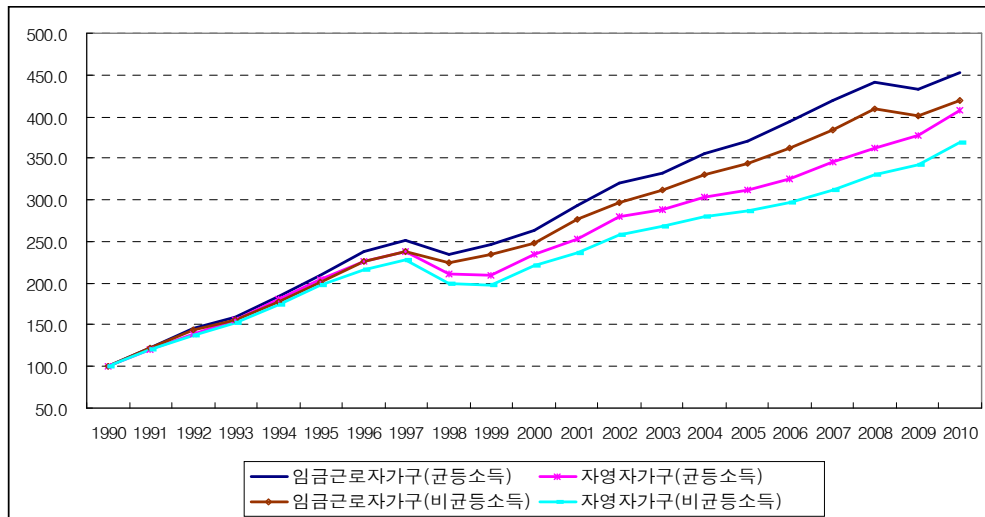
(단위: %)

		1990	1993	1996	1998	2001	2003	2005	2008	2010
자영자 가구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근로+사업	84.8	83.9	81.8	80.4	76.7	75.8	73.3	70.4	70.7
	가구원근로+사업	12.3	13.9	15.2	16.2	19.6	21.0	21.9	24.7	24.8
	재산소득	0.7	0.6	0.9	0.9	0.7	0.4	0.3	0.4	0.2
	공적이전소득	0.4	0.3	0.5	0.4	0.9	0.9	1.4	1.9	2.0
	사적이전소득	1.9	1.2	1.6	2.1	2.2	1.8	3.0	2.5	2.3
임금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근로+사업	78.8	77.6	74.5	75.6	74.3	74.6	72.6	72.9	72.2
	가구원근로+사업	16.6	18.5	21.3	20.0	21.2	21.8	22.3	21.9	22.2
	재산소득	1.0	1.0	0.9	1.2	0.9	0.4	0.4	0.3	0.3
	공적이전소득	0.6	0.6	0.8	0.6	1.0	0.9	1.5	1.9	2.4
	사적이전소득	3.0	2.3	2.5	2.6	2.6	2.3	3.3	2.9	2.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은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의 실태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자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은 1996년 이전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시장소득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이후부터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2000년에 회복세로 돌아서지만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자영자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

[그림 1] 자영자 가구의 소득지수 변화 추이: 1990-20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명목) 규모 및 지수변화: 1990-2010

(단위: 천 원, %, 배)

	균등소득		비균등소득	
	자영자 가구 (1990=100)	임금근로자 가구(1990=100)	자영자 가구 (1990=100)	임금근로자 가구(1990=100)
1990	473 (100.0)	454 (100.0)	964 (100.0)	897 (100.0)
1991	572 (120.8)	558 (122.9)	1,156 (120.0)	1,100 (122.6)
1992	658 (139.0)	660 (145.3)	1,325 (137.5)	1,287 (143.5)
1993	740 (156.3)	725 (159.7)	1,475 (153.1)	1,399 (156.0)
1994	856 (180.7)	836 (183.9)	1,683 (174.7)	1,590 (177.4)
1995	967 (204.2)	950 (209.1)	1,903 (197.5)	1,801 (200.9)
1996	1,069 (225.7)	1,079 (237.4)	2,086 (216.5)	2,027 (226.1)
1997	1,126 (237.8)	1,143 (251.6)	2,190 (227.3)	2,138 (238.4)
1998	999 (211.0)	1,066 (234.7)	1,921 (199.4)	2,008 (223.9)
1999	993 (209.7)	1,121 (246.7)	1,905 (197.7)	2,099 (234.1)
2000	1,115 (235.5)	1,197 (263.4)	2,128 (220.9)	2,224 (248.0)
2001	1,202 (253.9)	1,337 (294.2)	2,270 (235.6)	2,475 (276.0)
2002	1,328 (280.4)	1,456 (320.4)	2,488 (258.2)	2,667 (297.4)
2003	1,367 (288.8)	1,510 (332.3)	2,583 (268.0)	2,796 (311.9)
2004	1,436 (303.4)	1,613 (354.9)	2,697 (279.9)	2,965 (330.6)
2005	1,478 (312.1)	1,684 (370.7)	2,758 (286.2)	3,078 (343.3)
2006	1,542 (325.7)	1,788 (393.5)	2,854 (296.2)	3,249 (362.3)
2007	1,638 (345.9)	1,902 (418.6)	3,002 (311.5)	3,450 (384.8)
2008	1,717 (362.7)	2,003 (440.8)	3,186 (330.6)	3,674 (409.7)
2009	1,790 (378.1)	1,965 (432.4)	3,303 (342.8)	3,592 (400.6)
2010	1,927 (407.1)	2,055 (452.3)	3,553 (368.8)	3,755 (418.8)
증가율(배)	6.9 (4.1)	7.5 (4.5)	6.4 (3.7)	7.1 (4.2)

주: 증가율은 1990~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과 비균등화 시장소득 모두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6.9%, 6.4%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는 각각 7.5%, 7.1% 증가해 자영자 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1990~2010년 동안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소득지수 변화는 2000년에 235.5에서 2010년 407.1로 나타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같은 기간 263.4에서 452.3으로 소득증가가 자영자 가구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균등화 시장소득의 경우 자영자 가구는 20여 년 동안 3.7배 증가에 그쳤다면, 임금근로자는

4.2배 증가를 기록했고, 시장소득을 가구원수로 조정한 균등화 소득의 경우에도 자영자 가구(4.1배)에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4.5배)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Ⅲ. 자영자 가구의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

<표 4>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 수준과 추이를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해 놓고 있다. 1996년 당시 시장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규모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2.5%를 기록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 절대빈곤율은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자 가구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다가 2010년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3.8%)이 임금근로자 가구(4.8%)보다 소폭 감소한다.

자영자 가구 중에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비중은 1996년 9.0%이던 것이 1998년 18.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해 2010년 현재 9.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이 비중은 1996년 8.4%에서 1998년 14.2%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0년 8.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거나 혹은 빈곤선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비중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았고 2010년에 들어서야 그 차이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생계비 150~200% 미만 가구와 200%

<표 4>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와 변화: 시장소득 기준

(단위: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1996	2.5	3.3	5.7	16.7	71.8	2.5	2.3	6.1	16.2	73.0
1998	5.9	5.9	12.2	23.2	52.9	5.5	4.7	9.5	18.6	61.8
2001	3.9	4.9	8.9	20.3	62.0	3.5	3.5	7.3	17.4	68.3
2003	3.5	3.1	7.4	19.0	67.1	3.1	2.4	5.3	11.6	77.6
2005	5.1	3.7	6.8	16.8	67.5	3.5	1.9	4.3	10.7	79.6
2008	4.9	3.8	7.6	18.9	64.8	4.6	2.4	4.8	13.0	75.2
2010	3.8	3.4	5.6	15.9	71.3	4.8	3.4	4.9	13.4	73.6

주: 시장소득은 명목·비균등소득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5>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와 변화: 시장소득 기준

(단위: %)

	전체	구성비			발생비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무직자(기타) 가구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990	7.8	22.7	53.4	23.9	6.3	6.2
1993	8.2	24.4	45.5	30.1	6.5	5.8
1996	8.2	28.7	43.2	28.1	7.5	5.7
1998	11.4	19.5	35.6	44.9	7.2	6.9
2001	11.3	19.8	33.9	46.3	7.0	6.7
2003	13.1	17.3	37.4	45.3	7.5	8.3
2005	13.6	22.7	39.1	38.2	10.5	8.8
2008	14.7	20.9	36.0	43.1	11.7	8.5
2010	14.9	13.2	38.7	48.1	8.4	9.2

주: 시장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상 가구, 즉 절대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가구비중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자영자 가구는 2010년 기준 각각 15.9%, 71.3%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13.4%, 73.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5>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가구(2인 이상)의 상대빈곤율과 빈곤가구의 구성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비중으로 정의 된다.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0년 7.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14.9%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기준 전체 빈곤가구는 자영자 가구가 22.7%, 임금근로자 가구 53.4%, 무직자 가구 23.9%로 구성되었으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구성이 크게 감소해 2010년 자영자 가구 13.2%, 임금근로자 가구 38.7%, 무직자 가구 48.1%로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의 우측에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중(발생비)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90년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6.3%에서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7.2%까지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11.7%까지 증가했다.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현재 8.4%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90년대의 6~7%대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규모도 1990년 6.2%에서 2010년 현재 3.0%p 증가한 9.2%의 상대빈곤율을 기록해 우리나라 전반에서 빈곤위험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적자가구 비중과 흑자규모(금액)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자가구 비중은 가처분소득(경상소득-공적비소비지출³⁾)보다 가구소비지출 규모가 큰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 가구

의 저축여력과 실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영자 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큰 가구비중은 1990년 10.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10.7%로 소폭의 증가에 그쳤으나, 외환위기를 지나온 2001년에 19.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자영자 가구 내 적자가구의 규모는 이후 크게 줄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2008년 24.2%까지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적자가구 비중은 19.7%로 2008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자영자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가구의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가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영자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은 2010년 기준 임금근로자 가구의 18.0%보다 높은 수치이다. 흑자 규모에 있어서도 자영자 가구는 2010년 기준 494천 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69천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아졌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수익창출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자영자 가구의 저소득 위험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자 가구는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과 급여가 - 그것이 자발적이든 혹은 비자발적이든 - 포괄성과 충분성 모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 6> 자영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 적자가구 비중 및 흑자액(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원)

	적자가구 비중		흑자액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A)	임금근로자 가구(B)	A-B
1990	10.4	10.7	133,002	139,469	-6,467
1993	9.3	10.2	230,369	237,400	-7,031
1996	9.5	10.5	351,682	351,265	418
1998	10.7	9.2	298,972	366,673	-67,701
2001	19.9	14.9	252,629	359,441	-106,812
2003	19.0	13.9	323,039	427,732	-104,693
2005	21.9	15.4	330,215	473,231	-143,016
2008	24.2	15.4	429,908	590,394	-160,486
2010	19.7	18.0	494,436	568,760	-74,324
증가율(평균)	16.1	13.1	15.7	16.9	-74,457

주: 가처분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3) 공적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사회보험) 등의 가구지출을 의미한다.

IV. 가구주 특성별 빈곤율 및 소득수준의 변화

여기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학력과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과 소득수준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본다. 기존연구는 자영자(가구)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저숙련-저소득(영세성) 관계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이승렬 외 2009; Lofstrom, 2009).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그간 과포화 상태의 자영자 감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영업시장에서 빠져나가 임금근로자로 흡수되기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곧바로 빈곤화되는 현상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된다. 과거에 비해 창업이 손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창업에 일정한 숙련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임금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등은 자영자의 저숙련-저소득 연결고리를 쉽게 끊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7>에서는 빈곤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변화를 제시해 주고 있다. 빈곤 자영자 가구에서 초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3.6%에서 2000년 14.2%로 크게 줄었으나 2010년 21.0%로 다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졸 이하 학력층의 구성도 19~23% 수준으로 높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초졸 이하 저학력층 구성이 1990년 38.0%에서 2010년 16.9%까지 크게 하락했고,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도 같은 기간 26.8%

<표 7>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변화: 시장소득 기준

(단위: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력	초졸	23.6	14.2	21.0	38.0	16.2	16.9
	중졸	22.8	18.7	20.9	26.8	24.5	12.0
	고졸	47.7	55.0	39.2	32.7	45.0	53.4
	초대졸	0.5	6.1	7.7	1.2	6.5	7.5
	대학 이상	5.4	6.1	11.3	1.4	7.9	10.2
연령	30세 미만	6.2	5.1	0.0	17.5	10.2	3.7
	30~44세	64.7	58.3	27.3	58.2	54.1	42.7
	45~64세	25.6	32.0	50.7	23.3	30.8	36.9
	65세 이상	3.5	4.5	22.1	1.0	4.9	16.7

주: 1) 시장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2) 빈곤가구는 상대빈곤율 기준에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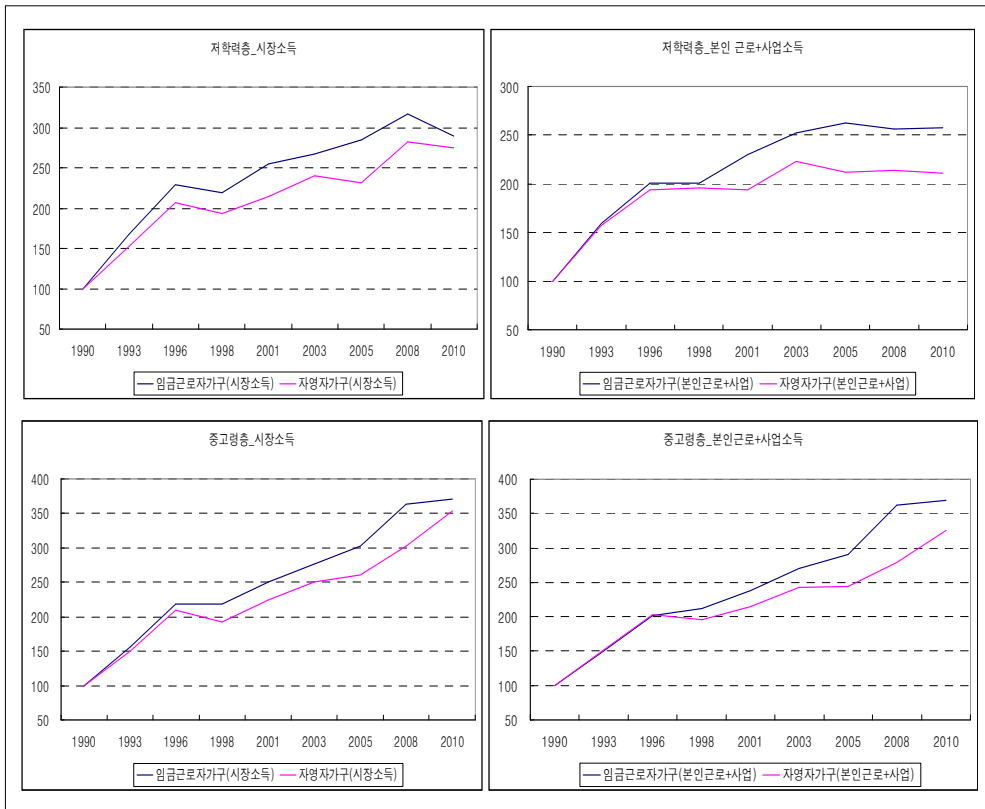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에서 12.0%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빈곤에 처해 있는 자영자 가구의 저학력층(초졸+중졸 이하) 구성은 41.9%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28.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연령별 빈곤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고연령층에서의 빈곤구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자영자 가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1990년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30~44세에서 64.7%로 가장 높았고 45~64세(25.6%), 30세 미만(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에는 45~64세 중고령층이 전체 빈곤 자영자 가구의 절반(50.7%)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22.1%로 10년 사이(2000년 4.5%)에 크게 증가했다.

자영자 가구의 빈곤위험은 임금근로자 가구와는 달리 저학력층과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그림 2]에서는 초졸 이하 저학력층과 45~64세 중고령층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구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변화를 비교해 놓고 있다. 우선 저학력층의 시장소득은 2005년을 제외하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그림 2] 저학력·중고령층 가구의 시장소득 및 본인 근로(사업)소득 지수 변화(1990년=100.0)



주: 시장소득과 가구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비균등소득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가구 모두 대체로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증가 폭은 임금근로자 가구가 자영자에 비해 높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본인 근로 및 사업소득의 증가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까지 소득증가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나타나다가 이후 시점부터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외환위기 시점인 1998-2001년, 그리고 2003년 이후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사업)소득은 증가 없이 정체된 모습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증가에 의해, 그리고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저숙련 자영자의 소득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층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는 임금근로자 가구와 유사한 추세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증가폭 자체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미치지 못한다. 특징적인 것은 가구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영자 가구에서 소득수준과 증가폭 모두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높았으나, 1998년부터 소득수준은 역전되고 임금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연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간 소득격차는 어느 소득계층에서 발생되며, 저학력·중고령 자영자 가구의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인가? <표 8>에서는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 기준)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32천 원(7.4%) 높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모든 분위에서 자영자 가구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0년에는 10분위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 자영자 가구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90분위)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7.0% 소득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 후인 2010년에도 지속되어 모든 분위에서 자영자 가구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나타난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저숙련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0년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21.9%(74천 원) 높았다. 특히 10분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임금근로자보다 24%가량 높은 소득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2000년과 2010년에도 저숙련 자영자의 소득수준은 10분위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저학력층 내에서의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는 20년 전인 1990년에 비해 대폭 완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자 소득이 2000년에 임금근로자보다 낮아지는 소득역전이 일어났고 2010년 그 격차는 7.9%(45천 원)까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고령층(45-64세)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4.4%(21천 원) 높았으며, 이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지난 2000년에는 중고령층 자영자 가구의

〈표 8〉 소득분위별 소득격차와 변화: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천 원, %)

전 체		평균	소득분위				
			10	25	50	75	90
1990	임금근로자 가구	434	228	301	394	520	676
	자영자 가구	466	234	311	422	555	758
	차이(원)	32	6	10	29	35	82
	차이(%)	7.4	2.6	3.2	7.3	6.7	12.2
2000	임금근로자 가구	1,110	553	751	1,007	1,363	1,801
	자영자 가구	1,064	564	721	951	1,301	1,683
	차이(원)	-46	11	-29	-57	-62	-118
	차이(%)	-4.3	1.9	-4.1	-5.9	-4.8	-7.0
2010	임금근로자 가구	1,911	896	1,257	1,741	2,371	3,126
	자영자 가구	1,843	889	1,241	1,651	2,261	3,044
	차이(원)	-67	-7	-16	-90	-110	-82
	차이(%)	-3.5	-0.7	-1.3	-5.2	-4.6	-2.6
저학력층		평균	소득분위				
			10	25	50	75	90
1990	임금근로자 가구	336	176	231	315	413	521
	자영자 가구	410	182	289	389	520	646
	차이(원)	74	6	58	75	107	125
	차이(%)	21.9	3.6	25.3	23.7	25.9	24.1
2000	임금근로자 가구	904	489	617	810	1,134	1,435
	자영자 가구	980	487	671	872	1,159	1,561
	차이(원)	76	-2	55	62	25	126
	차이(%)	8.4	-0.3	8.9	7.7	2.2	8.8
2010	임금근로자 가구	1,284	563	761	1,173	1,635	2,233
	자영자 가구	1,416	519	866	1,370	1,815	2,506
	차이(원)	132	-45	105	197	181	273
	차이(%)	10.3	-7.9	13.8	16.8	11.0	12.2
중고령층		평균	소득분위				
			10	25	50	75	90
1990	임금근로자 가구	488	241	324	437	596	792
	자영자 가구	510	260	343	450	638	826
	차이(원)	21	19	19	13	42	34
	차이(%)	4.4	7.8	5.9	2.9	7.1	4.3
2000	임금근로자 가구	1,217	578	782	1,102	1,546	1,984
	자영자 가구	1,134	594	777	1,035	1,387	1,787
	차이(원)	-84	16	-4	-68	-159	-197
	차이(%)	-6.9	2.7	-0.6	-6.1	-10.3	-9.9
2010	임금근로자 가구	2,049	942	1,325	1,860	2,552	3,420
	자영자 가구	2,007	983	1,363	1,815	2,506	3,260
	차이(원)	-42	41	38	-45	-45	-161
	차이(%)	-2.1	4.4	2.9	-2.4	-1.8	-4.7

주: 가처분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6.9%(84천 원) 낮아졌고,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다. 2000년 소득계층별로는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에서 자영자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분위에서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진다. 2010년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에서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뚜렷하다.

V. 맺음말

기술집약적 경제(skill intensive economy)하에서의 자영자의 저숙련 문제는 저소득(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손쉬운 창업으로 인한 자영업 부문간 경쟁이 과열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영업자와 이들 가구의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시기를 거쳐오면서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노동시장 유입이 이루어졌던 특수적 경험까지 겹치면서 자영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중고령 노동력이 자영자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도 자영업 노동시장 성과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자영업 부문의 저숙련-중고령화-저소득의 연결고리를 풀어 해당가구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보인다.

이 글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자영자 가구(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는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영자 가구소득이 임금근로자를 앞서 있었으나 이후 시점부터는 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증가폭 자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 약화는 배우자를 포함한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혹은 빈곤선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비중은 2008년까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2010년에 들어서야 그 차이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 가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즉 적자가구 비중이 자영자 가구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흑자규모도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초졸 이하 저숙련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는 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중고령층에서는 반대로 고소득층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영업 부문의 저숙련화·중고령화 현상이 노동시장 성과의 영세성과 열악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영업 노동시장의 저숙련-중고령화의 문제는 (임금근로자)가구간 격차는 물론 (자영자)가구내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자영업 부문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이들 가구의 저소득 위험과 소득격차를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영자의 저소득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영자 내부 혹은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숙련격차를 해소하는 훈련투자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1]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1년 8월 19일자 보도.

박희석(2011), 「서울시 자영업: 특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 『SDI정책리포트』 제82호, 서울시정개발원.

이승렬·김종일·박찬임·이덕제·홍민기(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Lofstrom, M.(2009), “Does Self-Employment Increase the Economic Well-Being of Low-Skilled Workers?,” IZA Discussion Paper No. 4539,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